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선진경제실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Tel: 044-414-1035)



차 례

1. 회담 개요
2. 주요 분야별 회담 결과
3.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1년 4월 16일 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가 정상회담을 실시함.
 -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기후변화, 첨단기술 관련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실시함.
- ▶ 양국 정상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기후변화, 대중 공급망 분리, 아시아 역내 안보, 코로나19 공동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 데 의견을 모음.
 - [기후변화] 2030년 탄소배출 삭감 목표치 상향 조정 및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체결함.
 - [공급망 분리] 5G 기술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함.
 - 단 5G, 바이오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 계획 또는 중점 협력 사안이 명시되었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핵심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의 육성 보호를 위해 협력한다'에 그쳤으며, 희토류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음.
 - [역내 안보] 센카쿠열도, 대만 등과 관련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홍콩·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함.
 - 미·일 공동선언문에 대만문제가 명시된 것은 닉슨-사토 회담 후 52년 만이며,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견제론에 한발 더 깊게 관여하게 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됨.
 - [코로나19 대응]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백신 접종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및 WHO 개혁 등에 합의함.
-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 기초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추후 일본의 대중국 정책에서 드러날 것임.
- ▶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중국 배제에 대한 동참, 기후변화 관련 산업정책의 변화 등 어려운 요구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일본의 정상회담 후속 대응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논의 내용을 보면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미·일 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진할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우리나라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5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LNG,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대폭 절감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까다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1. 회담 개요

■ 2021년 4월 1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짐.

- 스가 총리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 2020년 11월 말부터 정상회담을 요청해 왔으며, 2021년 4월 16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이 성사됨.
-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의 트뤼도 총리와 화상회담을 실시(2021. 2. 23)한 바 있으나, 대면으로는 스가 총리가 처음임.
- 양국 정상은 처음 20분간 통역만 대동한 채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소수 회담 55분, 확대 회담 65분 등 총 2시간 30분간 회담을 실시함.
- 확대 회담에 미국 측은 블링컨 국무장관, 옐런 재무장관, 러만도 상무장관이 참석하였고, 일본 측에서는 사카이 관방부장관과 스가 총리의 보좌관 두 명이 참석함.
- 정상회담 후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과 함께 기후변화, 대(對)중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함.

■ 양국 정상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두고 기후변화, 대중 공급망 분리, 역내 안보, 코로나19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는데 의견을 모음.

- [기후변화] 2030년 탄소배출 삭감 목표치 상향 조정 및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체결함.
- [공급망 분리] 5G 기술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기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양국간 향후 역할분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부속서를 채택함.
- [역내 안보] 센카쿠열도, 대만 등과 관련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홍콩·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시켰으며, 북한의 비핵화로의 이행을 촉구함.
- [코로나19 대응]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및 WHO 개혁 등에 합의함.

■ 이에 본고에서는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주요 분야별 회담 결과

가. 기후변화

■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하고 2030년 탄소배출 삭감 목표치를 확정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향후에도 양국간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체결함.

-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 직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21. 1. 20)하였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The American Jobs Plan)에서 청정에너지·바이오 기술 등에 약 4,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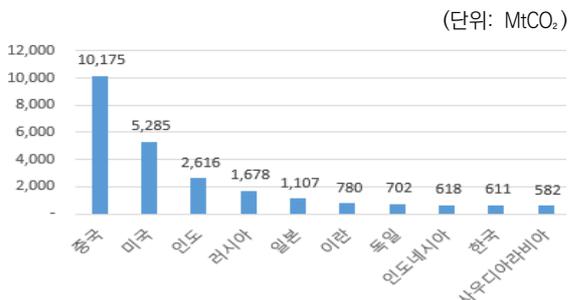
- 일본 역시 스가 총리가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선언('20. 10)하였으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위한 검토에 돌입, 기후정상회의('21. 4. 22)에서 상향된 목표를 발표함.
 - o 기후정상회의에서 일본은 '13년 대비 26% 감축 → 46% 감축목표를 제시
-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인프라 수출 확대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 등으로 인해 EU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양국이 기후정상회담에서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발표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향후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²⁾
- 미·일 양국 정상은 '2050 탄소배출 실질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일 기후변화 파트너십 (Japan-U.S. Climate Partnership on Ambition, Decarbonization, and Clean Energy)'을 체결하고 별도의 부속문서를 채택함(표 1 참고).

표 1. 기후변화 파트너십 협정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파리협정 이행에 관한 협력·대화	· 미·일 양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에 관한 대화를 지속 → NDC(2030년 국가별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계획과 정책 위주
기후·클린 에너지의 기술 및 이노베이션	· 미·일 양국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수소, 이산화탄소 회수·이용·저장/탄소 재활용, 산업의 탈탄소화, 혁신 원자력 등의 분야를 포함한 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그린성장 실현을 위해 협력 · 동 협력은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최적화 및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포함한 분야에서의 공조를 통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인프라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촉진
제3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협력(제3국 인프라 투자)	· 미·일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국가들 및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선언 · 동 협력은 계획·분석, 기후변화를 고려한 인프라 개발 및 구축 등의 분야에서의 전략적 제휴까지 포함 ·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기타 동맹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 이행, 재해 리스크를 위한 추가적인 관민자급의 동원과 관련된 협력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그린 부흥·성장을 위해 노력

자료: 外務省(2021), "Japan-U.S. Climate Partnership on Ambition, Decarbonization, and Clean Energy."

그림 1.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배출량 순위



자료: Global Carbon Atlas(검색일: 2021. 4. 13).

표 2. 주요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가	감축목표
미국	· 2025년까지 '05년 대비 26~28% 감축 → 2030년까지 '05년 대비 50~52% 감축
EU	· '90년 대비 55% 감축
일본	· '13년 대비 26% 감축 → '13년 대비 46% 감축
한국	· '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 기후정상회담 때 상향 감축 결정

자료: 환경부(202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청사진, 2050 탄소중립 비전 확정」 및 일본 언론보도 종합.

■ 다만 미국 측이 2030년 탄소배출 삭감 수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LNG·석탄 관련 내용이 공동선언문 등에서 제외되었고, 존 케리 기후특사가 회담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상회담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1) The White House(2021. 3. 31), "The American Jobs Plan."

2) 「日米、気候変動で新協定、16日に首脳会談、脱炭素目標を協議」(2021. 4. 5), 『日本経済新聞』.

- 바이든 정부의 요구로 일본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2013년 대비 26% 감축 → 40%대 감축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음.
- 한편 미국은 정상회담 전 ‘화석연료 관련 공적국제금융을 중단한다’는 문구를 공동선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공적국제금융을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의 대폭 감축에 기여하는 것으로 함’이라는 표현으로 최종 수정됨.
 - 미국정부의 요구는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국제금융을 중단할 것’이라는 문구였으나, 일본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지원 재검토’를 주장함. 미국은 LNG를 사용한 발전소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³⁾
-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케리 특사가 중국 일정 등을 이유로 확대회담에 불참함.
 - 케리 특사는 정상회담 전 고이즈미 일본 환경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일본의 화력발전 수출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음.
 - * 일본은 2020년 7월 인프라 시스템 수출전략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의 수출에도 공적금융 지원이 가능하다는 기존 기초를 유지함.

나. 대중 공급망 분리(디커플링)

- 미·일 양국은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반도체 제조장치, 5G 분야 등에서 ‘Entity list’ 규제와 같은 대중국기업 수출규제 등 일련의 견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2월 24일 △ 반도체 △ EV용 배터리 등 대용량 배터리 △ 희토류 △ 의약품 등 주요 4개 분야의 공급망 위험도를 검토하고, 위험에 따른 대응책이 포함된 보고서를 10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음.⁴⁾
 - 일본정부는 2000년대부터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China+1’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약품, 제조업 부문에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자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대체, 사용 절감 등을 통한 공급망 재구축 방침이 포함된 긴급경제대책(20. 4. 20)을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음.⁵⁾
-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5G 기술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는데 합의함.
 - 미·일 정상은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육성·보호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민감한 분야의 공급망(sensitive supply chain)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바이오기술, AI, 양자과학, 민생우주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표 3 참고).

3) 「脱炭素30年目標、首相、気候サミットで提示、米、事前折衝でLNG支援停止を主張。」(2021. 4. 19), 『日本経済新聞』.

4) The White House(2021. 2. 24), “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

5) 内閣府(2020. 4. 20),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緊急経済対策~国民の命と生活を守り抜き、経済再生へ(令和2年4月20日変更の閣議決定)」, p. 30.

- 한편 5G와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 및 Open-RAN 등 안전하고 개방된 네트워크를 추진’하며, ‘5G 등을 포함한 안전한 네트워크’의 개발에 미국, 일본이 공동 투자하겠다는 방침이 공동선언문과 부속서에 포함되었는데, 동 표현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도 있음.⁶⁾
-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일 양국의 기술이 “전제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함.⁷⁾

표 3. 첨단기술 분야의 미·일 협력 논의사항

분야	주요 내용
첨단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 촉진,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 및 다양한 시장의 촉진에 의한 Open-RAN 등 안전하고 개방된 5G 네트워크 추진 ·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망(6G 등)을 포함한 안전한 네트워크 및 첨단 ICT 연구, 개발, 실증, 보급에 투자하여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 미국이 25억 달러, 일본은 20억 달러 투자 · 미·일 양국 파트너의 사이버보안 능력 구축, 제3국에서의 미·일 협력 성공사례를 토대로 한 ‘글로벌 디지털 연결성 파트너십’ 및 이를 통한 타국과의 협력 실시 · 국제표준 책정에 있어서 미·일 양국의 ICT 전문가에 의한 정보교환 등 강화 · 반도체 포함, 핵심 분야의 공급망 및 핵심 기술의 육성·보호를 위해 협력 · 계층 해석에 중점을 두고 개방성, 투명성, 공조·연구의 공정성 등 원칙에 입각한 바이오기술 발전 · 공동연구 및 연구자의 교류를 통한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기관간 공조, 파트너십 강화 등

자료: 外務省(2021. 4. 16), “U.S.-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U.S.-JAPAN GLOBAL PARTNERSHIP FOR A NEW ERA” 및 “U.S.-Japan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CoRe) Partnership.”

- 한편 반도체, 희토류 등에서는 미·일 간 협력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 향후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위험도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일본에서는 미·일 양국이 희토류·의약품의 공급망 구축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공동선언문 및 부속문서에는 이 점이 언급되지 않음.⁸⁾
- 5G, 바이오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투자 계획 또는 중점 협력 사안이 명시되었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핵심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의 육성 보호를 위해 협력’에 그쳤으며, 희토류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음.
- 다만 양국은 첨단기술,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세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한바,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추후에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다. 아시아 역내 안보

- 미·일 양국은 센카쿠열도, 대만 등과 관련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홍콩·신장위구르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포함하였으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함.
- 양국은 공동선언문에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열도(尖閣諸島, 중국명칭 댜오위다오)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미·일 양국은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施政)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문구를 명시함.

6) 「日米が脱炭素リード」、首相半導体供給網でも協力(2021. 4. 17), 『日本経済新聞』.

7) The White House(2021. 4. 16), “Remarks by President Biden and Prime Minister Suga of Japan at Press Conference.”

8) 「日米首脳会談 「尖閣に安保適用」明記へ 共同文書 中国をけん制」(2021. 3. 26), 『読売新聞』.

- 또한 미·일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안(兩岸)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삽입함.
 - 미·일 공동선언문에 대만문제가 명시된 것은 닉슨-사토 회담 후 52년 만이고, 일본이 미국의 중국 견제론에 한발 더 깊게 관여하게 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됨.
- 미·일 양국은 홍콩 및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중국과의 솔직한 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직접 우려를 전달할 의향임을 재차 표명함.
 - 미국과 EU는 신장위구르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음.
- 양국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UN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의 선언을 재확인함. 또한 공동선언문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과 관련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타국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됨.

■ 한편 양국 정상은 대만 및 홍콩 신장위구르 자치구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중국 견제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공동선언문 내용의 조율 과정 및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일부 사안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임.

- 정상회담 이전에 개최된 미·일 양자간 2+2 고위급 회담(20. 3. 16)의 공동발표문에서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라고만 명시되었으나, 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에는 ‘양안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함’이라는 표현이 추가됨.⁹⁾
 - 일본은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1972년 이후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하여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만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해왔음. 2+2 고위급 회담 직후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반발을 샀던 점을 감안하여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중국과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음을 반영함.¹⁰⁾
- 한편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는 “(북한에)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약속 이행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일치하였다”고 발언하였으나, 공동성명에는 CVID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명시됨.
 - 이에 대해 일본에서는 미국이 대북정책의 재검토를 마칠 때까지 확정적인 표현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제외했다는 분석도 존재함.¹¹⁾
 - 다만 스가 총리는 총무성 접대 스캔들 및 코로나19 대응 실패로 인해 내각 불신임안이 거론되고 있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해 비록 공동선언문에는 제외되었으나 기자회견장에서는 CVID라고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라. 코로나19 공동 대응

■ 미·일 양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및 WHO 개혁 등에 합의함.

-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백신 접종 확대, 개인 방호물자 등 의료물자 제조 촉진 등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하기로 합의함(표 4 참고).

9) 外務省(2021. 3. 16), 「日米安全保障協議委員会(日米「2+2」)の結果」, https://www.mofa.go.jp/mofaj/na/st/page1_000942.html(검색일: 2021. 4. 5).

10) 「日米、中国と対峙鮮明、首脳会談、日本「防衛力を強化」、共同声明を「羅針盤」に(2021. 4. 18)」, 『日本経済新聞』.

11) 「「北朝鮮の完全非核化」確認 拉致問題、米「即時解決」 日米首脳会談(2021. 4. 18)」, 『朝日新聞』.

- 2021년 3월 12일 쿼드(Quad) 정상회담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백신 제조·조달·배송 확대를 목표로 하는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함.
- 또한 미·일 양국은 팬데믹 예방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WHO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함.

표 4. 코로나19 및 보건 분야에 대한 미·일 간 협력방안(부속서)

항목	주요 내용
코로나19 대응·글로벌 헬스·건강안전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백스 시설을 포함, ACT(Access to COVID-19 Tools)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양국의 지원을 강화하고, 다른 파트너들에게도 동일하게 대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백신, 치료약 및 진단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자금 수요에 협력 · 쿼드 백신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의 코로나19 백신 제조능력 확대,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제조·조달·수송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 · 개인 방호물자(PPE) 및 공중위생 위기 시 필요한 의료물자 제조 촉진을 위해 파트너와 협력, 지역의 팬데믹 대처 능력 확립 · 독립된 감시체제, 팬데믹 대응에 대한 설명책임 구축 등 WHO 개혁을 위해 협력 · 코로나19의 기원, 미래의 원인불명 전염병에 대한 검증 시간 및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투명하면서도 독립된 평가 및 분석 지지 · 혁신적·효과적인 방법 및 기술 개발을 위해 토미오카(일본), Summit(미국) 등 슈퍼컴퓨터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포함하여 데이터 및 식견 공유 · 연구기관간 협력 및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강인한 의료물자 공급망 구축 등

자료: 外務省(2021), 「U.S.-Japan Competitiveness and Resilience (CoRe) Partnership」

■ 양국은 기존의 통상관계 강화 및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공동 대처 등에 협력하기로 함.

- 미·일 양국은 △ 디지털 무역의 국제규범 책정 △ 기후변화 관련 목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의 책정 △ WTO 개혁 등 공통의 이익을 추진하고, 양국간 통상관계를 유지·강화하기로 협의함.
- 또한 양국은 양자간, 또는 G7 및 WTO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이전, 과잉생산 문제, 산업보조금의 이용을 포함한 비시장적 무역관행, 또는 기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 한편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후쿠시마산 쌀을 포함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 금지조치를 철폐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미국 측이 이를 수용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음.¹²⁾

3.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및 전망

■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 기조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은 공동선언문에서 ‘불법적인 행위’ 또는 ‘전제주의가 아닌 민주주의적인 방식’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중국에 대한 대립 의도를 명확히 함.

12) 外務省(2021. 4. 16), 「日米首脳会談」,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1_000951.html(검색일: 2021. 4. 18).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21세기에도 민주주의 국가가 경쟁에 이긴다는 점을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일본은 안보 측면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였으나, 도쿄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미온적이고, 미국의 중국경제론이 자칫 중일관계를 위협에 빠트릴 여지를 남긴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무역수지 개선,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환율 이슈 등으로 일본을 압박하였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간 무역, 투자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아시아 역내 안보와 관련하여 미국의 신임 행정부와 관계를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센카쿠열도 등의 현안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얻었다는 점은 일본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다만 대만 및 홍콩·신장위구르 자치족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내정간섭이라는 반발을 샀으며, 일본 내에서도 중국이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규제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¹³⁾
- 일본은 희토류의 약 60%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의 대일본 수출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중국은 2010년에도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규제 조치를 실시한 바 있음.
-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단결의 상징으로서 도쿄올림픽 개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명하였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고 발언함.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표현도 스가 총리의 발언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 개최를 위한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에 그침.

■ 한편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향후 일본의 대중국 정책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임.

- 스가 총리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이 “향후 미·일 동맹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¹⁴⁾
- 하지만 일본은 인권문제 등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 일본은 중·일 경제관계를 감안하여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반드시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존재함.¹⁵⁾
- 일례로 일본은 G7 국가들 중 유일하게 신장위구르 자치구 문제와 관련하여 대중국 제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일본 내에는 인권을 이유로 타국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지만,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음.
- 따라서 향후 미국의 대중국 제재 압박 등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일본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기조에 대한 일본의 동참 수위 등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됨.

13) 「日米首脳会談・共同声明と懸念される今後の日中経済関係」(2021. 4. 19), 『野村総合研究所』.

14) 「日米、中国と対峙鮮明、首脳会談、日本「防衛力を強化」、共同声明を「羅針盤」に」(2021. 4. 18), 『日本経済新聞』.

15) 각주 13과 동일.

나. 시사점

■ 일본에 대한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요구가 경제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정부의 공급망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는 5월 말 이후에는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중국 배제 요구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경우처럼 미국의 중국 견제 동참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요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데, 정상회담 전에 실시된 양국간 외교·안보 고위급 회담(2+2 회담, 3월 16일)을 앞두고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 경제계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들은 불공정하고 위법한 관행에 대항하면서, 미래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음.¹⁶⁾
- 또한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5G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미·일 양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추진할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우리나라에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¹⁷⁾

■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분야에서 우리 정부에 어려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관련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변경이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재점검하고 대응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후정상회의 일정에 맞춰서 일본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일본정부는 서둘러서 목표 상향을 위한 검토를 진행함.
- 스가 총리가 직접 검토를 서두르도록 독려했으며, 이에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2030년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2013년 대비 26% 감축에서 46% 감축으로 대폭 조정함.
-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2+2 고위급 회담 전후 일본에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상회담을 1주일 정도 앞두고 ‘화석연료의 수출지원 중지’를 공동선언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음.
- 미국은 석탄 외에도 일본의 전력공급원인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 역시 지원 중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구하였지만, 일본은 LNG 활용이 제한될 경우 에너지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미국계 민간기업을 통해 미국정부에 어필한 것으로 알려짐.¹⁸⁾
-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2030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본에 대한 LNG 활용 중지 요구와 같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에너지원 등의 감축 등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여 대응 논리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임.
- 또한 5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LNG,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대폭 절감 등과 같이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한국 측에 까다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IEA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석탄발전량은 258TWh로 세계 5위를 기록함.¹⁹⁾

16) 「日米首脳會談 6G覇権争い 陣営作り進む」(2021. 4. 18), 『産経新聞』.

17) 「日米、中国と対峙鮮明、首脳會談——6G開発で巻き返し、中国に対抗、4900億円投資」(2021. 4. 18), 『日本経済新聞』.

18) 각주 3과 동일.

19) IEA, “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20.”

- 한편 이번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후속 대응은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추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함.
-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일본의 대응과 그에 따른 중국의 반응 등은 통상, 금융시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특히 중국·일본 간 경제관계 변화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KIEP**